

#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수급안정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수입만이 전부는 아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축산물 물가안정 대책이 수입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농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계란과 닭고기는 '약방에 감초'로 계란은 이미 1월에 112만톤이 수입되어 국내 소비자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가 되었고,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 6월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해 할당관세 정책으로 역대 최다 수입량(23만972톤)을 기록한 닭고기도 1분기에 3만톤을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아직은 보류 상태지만 닭고기 생산을 위한 병아리 부화용 종란을 수입하기로 한 계획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병원성 시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곧바로 계란수입을 추진하는게 연례행사로 굳어지는 느낌이 들어 씁쓸하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계란수입을 추진하면서 기대 이하의 효과를 거두면서 오히려 혈세만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육계 계열사를 통해 지원하려던 부화용 종란 수입도 본회 종계부화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계획이 보류되었지만 혈세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운송비 및 각종 경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농가들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철회된 상태가 아니고 언제든 불씨가 남아있어 주시해야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수급조절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내 부족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급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을 너무 쉽게 결정하여 우를 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계란과 닭고기가 넘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정부는 방관자 역할을 해왔다. 국내에서 남아도는 양계산물을 발 벗고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앞으로는 본회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 종계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생산되는 산물에 대한 수집 및 정확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작동할 때이다. 주먹구구식, 보여주기식,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양계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 육계계열화 이후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육비

현실적인 육계 사육비 인상 이루어져야

육계 계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괄 생

산체제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통구조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미국을 다녀온 선각자들이 미국 계열화사업을 모델로 개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이제는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어 98% 이상의 농가들이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과 농가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에 ‘축산 계열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열사와 농가들의 의무가 주어지고, 계약사육에 대한 범위설정,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매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많은 분쟁 소지를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계열화가 시작된 이후 30여년동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사육비이다. 계열농가들은 사육비를 받아 농장을 운영해 가고 있지만 최근 2~3년 동안 오를대로 오른 원자재 가격, 즉 사료비, 연료비, 전기료, 깔짚비 등으로 생산비는 크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닭고기 가격도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일부 계열사에서 kg당 25원 정도의 사육비를 올렸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올리지 않은 계열사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사육비 인상 문제는 계열화 초기부터 요구되어온 사안이지만 계열사들은 임의로 사료요구율을 조정하거나 사육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육비를 통보하면서 농가들의 불이익이 커졌던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사육비를 인상하였지만 시세보너스 기준을 상향시키면서 이마저도 상쇄시켜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떠올리게 한다.

각 계열사에는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측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어용’이라는 얘기가 빈번할 정도로 농가를 대변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끌려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사육비 인상은 피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농가와 계열사들이 서로 협의하여 현실에 맞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달라진 현실을 감안해 ‘사육비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농가와 계열사들 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